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任 明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동북아연구시리즈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任 明

국문요약

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래 수년간 ‘녹슨 지대’ 취급을 받던 동북3성 지역경제에 대하여 개조, 조정 및 진흥을 거쳐 중국의 제4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갑작스런 희소식은 중국 동북3성 주민들에게는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한국에도 도전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본문에서는 중국 동북3성 경제의 휘황찬란한 역사와 전략의 원인 및 금번 중국 정부의 동북3성 진흥 결정의 전략적 배경을 살펴본 후, 최근 동북3성 진흥에 관한 중국 중앙정부 및 동북 각 성의 계획 및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필자의 몇 가지 견해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중국의 동북3성 진흥기회를 중국과 한국은 어떻게 하면 상생(win-win) 의식을 가지고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지었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1장 머리말	7
제2장 中國 東北3省 진흥의 전략적 배경	9
제3장 中國 東北3省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사고	17
제4장 中國 東北3省 진흥과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24
제5장 맺음말	29
참고문헌	30
Executive Summary	31

표 차례

표 2-1. 동북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 현황	10
표 2-2. 주요 원자재 공급 현황	10

제1장 머리말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가 대거 출범하면서 개혁개방 이래 줄곧 ‘녹슨 지대’로 소외되었던 중국 동북3성에는 느닷없는 희소식이 전파되었다.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당시의 강택민 중공 총서기가 최초로 “동북 노공업기지(東北老工業基地)의 조정과 개조를 지지하고”, “자원의존형 도시와 지역에서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식량 주산지의 새로운 발전을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2003년 5월 중국의 4세대 지도진영 중 2인자인 온가보 총리¹⁾도 요녕성 시찰 중 ‘서부 대개발’과 동북3성 진흥을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두 바퀴의 수레에 비유하여 강조하면서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기간 동북3성을 중국 제4의 경제성장 중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949년 10월 중국 공산정부 출범 및 통치 이후 줄곧 “공화국의 장남”, “중국공업의 요람” 역할을 하던 동북3성 경제의 조정, 개조 및 진흥에 관한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경제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서, 이는 개혁개방이 제2단계에 진입한 중국 국내외 경제발전의 필연적 반영이며 또한 중국 지역경제정책의 중심이 주장3각주, 장강3각주, 발해만 지역에서 동북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이번 동북3성 진흥에 관한 결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북의 각 성들도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를 맞아 그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아울러 각각의 경제발전전략을 검토, 확정 및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온가보 총리는 현재 중국 ‘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 부흥지도소조 조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부조장은 황국(黃菊)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와 증배염(曾培炎)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맡고 있다.

금번 중국 동북3성 진흥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지 및 협조 아래 수십 년의 계획경제 역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영경제의 모든 단점들을 근절하고, 자금난—기술난—자재난—인재난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철저한 국영경제시스템의 개조 및 조정을 통하여 동북3성 진흥의 혈로(血路)를 개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의 글로벌시대 및 지역경제 단일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번 중국 동북3성 진흥도 반드시 국내 기타 지역 및 국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하여야 만이 가능하며 특히 한국과 같은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중국과 한국은 지난 수천년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냉전기를 거친후 1992년 중한수교 후 재차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고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근래 경제협력상황이 동북3성의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세계경제침체의 분위기 속에서 불경기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상생(win-win) 의식을 가지고 이번 중국 동북3성의 진흥기회를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형식 및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2장 중국 동북3성 진흥의 전략적 배경

중국의 선조는 황해유역, 즉 지금의 서안이다. 그 후 동부와 남부지역으로 많이 확장하여 원나라 때 중국의 영토가 가장 광활하였는데, 따라서 원나라 때 중국 국토의 북단은 지금의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서부는 지중해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당시 중국이 세계에서 떨친 위상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하였다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840년 중국의 아편전쟁 후 수천년간 봉건제도를 고집하여 왔던 중국도 영국 등 서방나라들의 자본주의 물결에 못 이겨 쇠퇴의 추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은 러시아 등 나라들에 의하여 많은 영토를 뺏기는 처참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동북3성만은 예전 러시아, 일본 등 나라들의 많은 침략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하며, 또한 동북3성은 20세기 초반까지 이 지역의 열악한 기후사정으로 항상 한반도의 함경도 취급을 받았다. 즉 매서운 추위로 인하여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중국 명나라·청나라는 황실의 관리들을 이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는 등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 동북3성의 주민들은 대체로 거란족 등 소수민족 외 한인들은 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중국 동북3성 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의 산둥성, 하북성 등 지역에서 물난리 등을 겪고 어려운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상한 이재민들 외 청나라의 원조인 만족들,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온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에 진입하면서 중국 동북3성의 중요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확실히 입증되었다.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합병을 전후로 일본은 또한 중국 동북3성의 거대한 삼림자원, 광활한 동북평야, 무한한 지하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일본은 중국의 9.18사변 후 이 지역에 밀집된 철도수송망 등 인프라

라구축을 바탕으로 중공업 · 군수공업 등을 대거 설치 한 외에 동북3성을 일본의 상품판매시장, 원자재 약탈대상 및 자국 침략전쟁에 필요한 공업발전지역으로 일삼았다.

표 2-1. 동북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 현황

	요녕(遼寧)	길림(吉林)	흑룡강(黑龍江)
석유	요하(반금)遼河(盤錦)	-	大慶
석탄	무순(撫順), 부신(阜新), 철법(鐵法), 북표(北票), 본계(本溪), 호로도(葫蘆島)	요원(遼源), 훈춘(琿春), 송원(松原)	계서(鷄西), 학강(鶴崗), 쌍압산(雙鴨山), 칠대하(七台河)
철	안산(鞍山), 본계(本溪)	-	-
삼림	-	돈화(敦化), 임강(臨江), 화룡(和龍)	이춘(伊春), 철력(鐵力)

표 2-2. 주요 원자재 공급 현황(2002)

	원유 (만 톤)	목재 (만 톤)	철강 (만 톤)	석탄 (억 톤)	자동차 (만 대)
전체	16,700	4,436	18,237	13.8	325
동북지역	6,857	1,234	2,368	1.3	80
비중	41.1	27.8	13.0	9.4	24.6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호.

20세기 1950년대 중반 당시 국민경제 회복과정을 거친 직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한 중국 공산정부는, 어쩔 수 없이 옛 소련의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 동시발전’ 경제성장모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요구에 가장 적합

한 지역이 바로 옛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천연자원(표 2-1, 2-2 참고)이 풍부하며 공업기초가 가장 탄탄한 동북3성이었다. 따라서 국민경제회복시기인 1953~55년 및 경제개발 1차 5개년계획 기간인 1956~60년 중국에서 옛소련의 원조로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가 각각 총 42건과 156건이었으며, 그 중 30건 및 58개가 동북3성에 투자될 정도로 동북3성은 중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계장비제조업의 요충지로, 중국 공업화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²⁾하였다.

예상치 못하였던 현상은 중국 동북3성의 이런 화려한 경제적 지위가 20세기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중국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면서 중국정부의 ‘녹슨 지역’, ‘소외된 지역’ 취급을 당하고 ‘개혁·개방의 혜택을 받은 지역’으로 꼽히기는커녕, 오히려 ‘동북현상’³⁾이나 일으키는 ‘골치덩이’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20여 년간의 ‘동북불황’을 야기한 것이다. 20세기 1950년대 중국 국토면적과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동북3성이 중국 공업생산의 약 25%를 창출하였다면 1980년에 와서 동북3성의 공업 총생산량과 G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4%와 4.3%⁴⁾, 동북3성은 중국에서 경제적 지위의 하강 폭이 가장 크

2) 중국의 20세기 1950~70년대의 계획경제시기 동북3성의 주요 중공업으로는 대경(大慶), 요하반금(遼河盤錦) 유전을 바탕으로 한 대련석유화학(大連石化), 반금요하화학공업(盤錦遼河化工), 금화화학공업(錦化化工), 목단강석유화학(牡丹江石油化學), 길림화학공업(吉林化工) 등 석유화학공업, 본계(本溪)철광을 이용한 안산(鞍山), 본계(本溪)철강 등 철강공업, 심양(沈陽), 하얼빈의 공작기계공업, 발전설비공업, 장춘(長春)의 제일자동차(第一自動車)공업, 대련(大連)의 조선중공업(造船重工業)과 신선중공업(新船重工業) 등 조선공업이다.

3) 1978년 이래 중국의 개혁개방은 우선 먼저 경공업, 3차산업 분야를 민영화하는 방침을 채택함으로써 동남연해지역의 신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공업, 특히 국영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3성의 경우, 민영화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이는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비생산성 및 노동자들의 실업을 야기하였다. 이를 중국의 학계에서는 ‘제1차 동북현상’이라 칭한다.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후, 외국의 질 좋고 값싼 대량 농산물이 중국 동남연해지역으로 수입되면서 동북3성의 옥수수, 콩 등 농산물을 외면하는 결과를 발생. 이를 중국 학계에서는 또한 ‘제2차 동북현상’이라 칭한다. ‘제1차 동북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제2차 동북현상’은 동북3성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4) 정사보(2003), 『‘동북현상’ 극복의 출로 탐구』, 뇌고쾌참(腦庫快參), 20쪽 참고.

고 가장 분명한(evident)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당연히 중국 동북3성의 경우, 계획 경제시기 ‘공화국의 보배지역’으로 불릴만큼 경제성장으로 인한 관심을 받다 개혁 개방을 일단 실시하자 ‘부담스러운 지역’, ‘골치덩이 지역’ 취급을 받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제체제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동북3성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사실 계획경제시기 동북3성 경제가 20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자동차·석유화학·철강·선박·기계제작 등 중공업을 대표로 하는 공업 및 쌀·콩·옥수수·통나무 등 농림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옛 소련의 아낌없는 지원 외에도 당시 이 지역의 대규모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적·물적 및 재정·금융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물며 계획경제체제하의 동북3성 국영기업들은 원자재와 인건비는 물론 기술혁신 걱정도 필요 없는 기인우천(杞人憂天)의 상황이 되다 보니 제품의 판로개척 또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이 일단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자 동북3성 국영기업들은 무엇보다 먼저 제품의 판로를 상실하게 되었다. 장시간 제품 품질 향상이 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 기타 지역에서도 동북3성 제품의 구입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게다가 시장경제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동북3성 대규모 국영기업들의 존재는 다량 제품의 적재, 노동자들의 실업 및 부도를 모면하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 동북3성의 심각한 자원고갈 현상 및 전자산업·IT산업 등 후속산업의 부진은 동북3성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되었다. 전술했다시피 중국 동북3성에는 석탄, 철광 및 기타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자원형 도시들이 많았지만 20세기 초반에 일본제국주의의 과도한 자원약탈과 20세기 후반기 중국 공업화의 수요로 인하여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동북3성의 많은 지하자원들은 고갈 현상을 빚게 되었다. 필자의 학생이 수행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현

재 중국 흑룡강성의 경우, 33개의 주요탄광 중 16개의 탄광은 이미 고갈상태이며 대경유전의 석유매장량도 단지 30%밖에 남지 않아, 2020년까지 매년 2,000만 톤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북3성의 이러한 심각한 자원고갈 현상은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상승효과도 유발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동남연해지역들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품질 좋고 값싼 자원들을 수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자본·기술 집약산업 및 IT 등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북3성의 자원우세가 더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북3성은 반드시 전자·IT 산업 등 신흥산업을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데다가 중국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 이래 중국의 경제발전 중심이 동북지역에서 동남연해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북3성은 점차 중국 경제발전중심지역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1950년대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당시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통일하여, 경제발전경험이 부족한, 옛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 외에 대외경제교류가 어려운 중국공산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옛 소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바로 여기에 지리적으로 옛 소련과 인접하여 있는 동북3성이 중국경제발전의 ‘중심지역’, ‘개발지역’으로 선택된 것이다. 즉 냉전기 중국경제발전의 지리적 전략은 동북에서 동남, 중남 및 서남, 서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 후부터, 특히 20세기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소련이 점진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고 20세기 1980년대 초반 중국에서 덩소평 등 개혁파들이 정권을 잡고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번에는 그 대책으로 동포들이 살고 있는 홍콩·대만은 물론 광활한 동남아국가들의 화교자본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 후 경제발전의 지리적 전략은 심천·산둥·하문·주해 등 남부지역에서 점차 동남·서남·중남·동북지역으로

복상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개혁개방 후 동북3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 1990년대 중국정부가 대대적인 ‘서부 대개발’ 구호를 소리 높여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동북현상’은 방치해놓은 데서도 충분히 알수있다. 즉 요녕성 외에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며 기후여건이 열악하고 외국자본의 유입도 동남연해지역에 비하여 어려운 동북3성이 당시 중국지도부의 생각으로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인기 없는 지역’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호금도 등 중국의 4세대 지도부가 대거 출범하면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동북3성 진흥’을 거론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연히 현 중국지도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있겠지만, 단순 경제적 차원에서 그 배경을 따져보면 아래의 몇 가지 전략적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첫 번째, 중공 제16대가 제안한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7.2%의 목표달성의 수요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경제개혁은 동구권 나라들의 급진적 개혁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리 점진적 개혁정책을 채택한 사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지역경제격차, 주민들의 빈부격차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2002년 중공 16대에서 중국은 또 2020년까지 연평균 7.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전면적인 소강(小康,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수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2010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 7.2% 달성은 동부 연해지역에만 의존하여도 충분하지만, 2011부터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 최근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지역을 발견하여야 하는데, 순리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20세기 1990년대부터 중국정부에서 먼저 서부대개발을 강조한 이상 서부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중심축으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인프라 등 기초적인 경제환경 정비마저 미비한 서부지역보다는 동북3성은 비록 낙후되긴 했

지만 천연자원, 자산총량, 산업기초, 과학기술, 기술인재, 기초시설 등 분야에서 훨씬 더 우세를 점유하고 있어 노후화된 설비와 낙후한 기술 교체, 시장경제의식만 붙여넣으면 서부지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의 온가보 국무원총리가 서부지역 대신 동북3성을 중국 경제발전의 제4의 경제성장 중심축으로 선정하고 육성하겠다는 발언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두 번째, 중국의 종합적 국력, 특히 국제경쟁력 제고의 수요이다. 한 나라의 종합적 국력은 그 나라 국가경제의 물질적 토대와 공업의 주체가 되어 있는 제조업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달려 있다. 국제적인 경험에서 보면 한 나라가 경공업발전 위주에서 제조업발전위주로 전환할 가장 합당한 시기는 바로 1인당 GDP가 1,000달러인 경우이다. 마침 2003년 중국의 1인당 GDP가 드디어 1,000달러에 달했으니, 중국을 놓고 말하면 현 시기가 바로 이 합당한 시기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겠다. 특히 21세기 초반 중국이 공업화 중기에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강화하여야 할 선도산업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동북3성이 바로 중국 제조업 발전의 이 요구에 부합된 것이다. 중국 동북3성의 경우 기계제조업, 특히 중형 장비제조업, 일반기계제조업, 금속제조업, 전용설비제조업, 수송설비제조업 및 전기 기계제조업 등은 상당한 생산량과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중국 전반 기계제조업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중국정부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는 동북3성에서 제조업의 이점을 새롭게 발굴하여 최저의 가격으로 최적의 선택을 함으로써 나라의 종합적 국력, 특히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세 번째,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각종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수요이다. 최근 지역경제단일화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동북아 각국들도 당분간 동북아 경제블록은 형성하기 어려울지라도 일단 먼저 양자간, 삼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두만강 지역 경제 개발구’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자본과 기술, 특히 사양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려 하고,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무한한 자원을 공동개발을 통하여 추진하길 원하며, 북한과 몽골은 인근 국가들인 동북아 각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동북3성은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러한 자본과 기술, 자원 및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상호 결합시킬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중국정부의 동북3성 진흥전략은 동북3성의 환골탈태의 변화를 통하여 동북아 국가간 경제 및 기타분야의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깔려 있다.

중국정부의 동북3성 진흥에 관한 결정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제2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현명한 조치로 생각된다.

제3장 중국 동북3성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사고

최근 동북3성 진흥에 관한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이 발표되자 동북3성 주민들은 그야말로 환희에 휩싸여 있다. 각 성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성의 기본적인 특성으로부터 출발해 향후의 발전방향과 목표 및 발전 전략들을 제시하는가 하면, 기업들은 좀더 나은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실직자⁵⁾들이 많은 노동자들도 조만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순수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학계 또한 대학·연구기관에 ‘중국 동북3성 국영기업 연구 센터’ 등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경제정책 및 실천의 뒷받침이 되는 대량의 사회조사와 이론연구에 착수한다고 여념이 없다. 중국정부도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발전 목표 및 단계 등 청사진, 필요한 재정적 지원⁶⁾도 실시하는 등 동북3성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각성의 진흥방안을 살펴보면, 요녕성의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이상을 바탕으로 1인당 GDP 2만 7천 위안, 약 3,261달러⁷⁾를 목표로, 심양-대련을 요녕성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자 동북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일단 먼저 공업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구조 조정 추진으로 기존 중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모색하는 외, 신규로 2개 기지(기계설비와 원자재 생산기지)와 3대 산업(첨단기술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현

5) 동북3성은 수십 년간 중요한 중공업지역으로서, 따라서 중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 시기 요녕성의 취업을 요구하는 인구는 160만, 길림성은 230만, 흑룡강성은 120만이나 된다.

6) 2003년 10월 중국 중앙정부는 벌써 1차로 동북지역의 100개 프로젝트에 610억 인민폐, 약 74억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였는데, 그 중 공업기반이 가장 탄탄한 요녕성이 52개 사업, 440억 인민폐를 지원받고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각각 37개 113억 인민폐와 11개에 57억 인민폐를 지원받은 상황이다.

7) 2002년 요녕성 1인당 GDP는 1만 2,986위안, 약 1,568달러이다. 중국 요녕성 노 공업기지 진흥 계획 참고.

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하여 요녕성의 기본적인 경제재건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길림성의 경우, 2010년까지 공업기지 재건을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산업구조를 2002년의 1차 산업 20.3%, 2차 산업 43.0%, 3차 산업 36.7%에서 2010년에는 13.0%, 50.0%, 37.0%⁸⁾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기존 자동차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녹색식품 생산기지, 의약생산기지, 첨단기술 산업기지, 자원형 도시와 후속 산업기지를 포함한 6대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흑룡강성의 경우, 공업비중이 비교적 높은 점을 활용하여 현재 400여 개의 중대형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영기업 비중을 현재의 80% 수준에서 2008년까지 30% 이하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30여 개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9% 이상, 2008년까지 GDP를 2000년의 2배⁹⁾ 수준으로 조기 달성하려 한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기존 기계설비,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생산기지, 의약생산기지, 식품산업기지를 포함한 5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외에,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 산림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러시아의 과학기술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중·러 과학기술 산업단지’도 건설하여 광전자, 신소재 등 첨단기술산업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정부의 동북3성 진흥방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지원에 앞서 동북3성 모든 주민들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내부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경제발전을 자체적으로 이루 하도록 한다는 것을 1대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공업기반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2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원자재·자본재 생산기지, 특히 대형 발전설비·공작기계·엔진 등

8) 중국 길림성 노 공업기지 진흥계획 참고.

9) 중국 흑룡강성 노 공업기지 진흥계획 참고.

생산기지로 부상시켜 공업생산액이 장강3각주, 주강3각주에 이은 제3위로 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① 과거 동북3성을 통틀어 공업화하는 공업화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방별로 주도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추진, ② 자원고갈로 산업이 쇠퇴한 도시에 기존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특정산업 발굴, 또는 정밀가공 등 성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 ③ 심양·장춘·하얼빈·대련 등 중심도시는 금융·무역·교통·연구개발 등 서비스 산업 강화를 통해, 무순·길림·계서 등 자원형 도시는 농산물 가공이나 생활용품 생산의 경공업분야로 다양화하며, 안산·본계·치치하얼 등 원자재 공급기거나 기계공업 위주의 도시는 상업·금융·교육·부동산 등 개발을 통한 서비스부문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간 유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 및 동북 각 성의 동북3성 진흥전략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전략적 사고의식을 지녀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부분적인 연구성과들도 나온 실정이다.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을 살펴보면 동북3성 진흥의 관건은 국영기업의 조정과 개혁이라는 견해,¹⁰⁾ 동북3성 기업의 정부 및 사회적 기능 수행 차단의 몇 가지 방법,¹¹⁾ 민영경제발전은 동북3성 진흥의 필연적 요구라는 견해,¹²⁾ 동북3성 진흥은 반드시 동북아 지역 나라들과의 밀접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¹³⁾ 등이다. 이와 같은 중국 학계의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필자는 중국 동북3성 진흥 목표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사고의식을 소유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10) 이는 중국 국무원 국영자산 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황숙화의 견해이다.

11) 이는 중국 흑룡강성 정부 연구실 부주임 손경본의 견해이다.

12) 이는 중국 길림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반석 교수의 견해이다.

13) 이는 중국 길림대학교 왕승금 부총장의 견해이다.

첫째, 중국 동북3성 진흥은 반드시 현 동북3성 경제의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자산소유권 재정립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중국 동북3성에 위치하여 있는 국영기업은 총 1,394개, 그 중 대기업이 709개로서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국영기업이 동북3성 고정자산·공업총생산·공업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5%, 76.64%, 73.57%로, 이는 국영기업이 동북3성 경제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국영기업들이 상술하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침체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가운데 동북3성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만무하다. 중국 학계에서 현 동북3성 국영기업들의 문제점들을 조사해본 결과,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재하겠지만 그 중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바로 기업 자산소유권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소유자 정립의 어려움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중국 학계에서는 일부 대안을 제시했으며, 예컨대 ‘국가자본운영위원회’, ‘국가자본운영기구’, ‘투자기업’ 등 세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국영기업의 직접적인 자산운영은 ‘투자기업’이 맡고 ‘국가자본운영기구’가 자산의 직접적인 소유자인 ‘국가자본운영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구체적으로 운영¹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자산증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만 사업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만 국가자산을 집중시키고 그 나머지 자산소유권, 즉 수익성 개선이나 발전 가능성이 낮은 국가자산은 합병·매각·감원·퇴출·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의 전환·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의 지분참여 등을 통해 가급적 빨리 기업의 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 동북3성 진흥은 반드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국영기업 중심의 예전 경제발전 모델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세기 1990년대 중·후반 ‘동북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14) 본 방안 또한 중국 길림성에서 현 시기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실정이다.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혁을 심화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하여 외자기업 등 민간부문의 국영기업 개조와 조정에 대한 지지·참여 및 협력을 거부하고 ‘국영기업’, ‘국영경제권 내에서의 개혁’ 범위를 이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중국정부 및 학계에서는 드디어 민간부문이 국영기업의 시장의식 수립, 국영기업의 유희직원 축소 및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계획 경제 역사를 소유하고 있는 현 동북3성의 경우,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현 시기 동북3성의 민간부문 발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은 상황과 관련하여 원자재 가공이나 중공업 중심에서 IT 등 첨단산업은 물론 경공업과 같은 노동집약산업 등으로 다원화하고, 취약한 산업 연관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점을 상호 분업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산업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며, 또한 ‘기존 민간부문을 강화하고 새로운 민간부문을 창설하며 외부의 민간부문 도입’을 원칙으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즉 과거와는 달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동북3성 경제는 반드시 국영기업과 민간부문의 주도로 그 진흥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중국 동북3성 진흥은 반드시 국영기업 및 민영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현대적인 기업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계획경제시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근까지 중국 동북3성 기업들의 경영시스템은 공장장(사장), 부공장장 등 경영진과 노3회(老三會), 즉 중국공산당 기업위원회·직원대표대회·공회(工會, 노조)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낙후한 경영관리시스템 속에도 기업 당 위원회의 과도한 업무간섭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사이는 그리 원활한 상황이 아니다. 아울러 중국 동북3성 진흥목표를 실현하려면 예전 기업 경영진 대신 신3회(新

三會), 즉 주주총회·이사회·감사의 설립이 불가피한데, 따라서 신3회와 예전 노3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예전 국영기업 임직원들의 국가 공무원 신분전환을 차단하고 국영기업 경영자의 공개모집 등 경영방식의 과감한 도입과 연봉제, 스톡옵션제 등의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그밖에 전반 기업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등 경영진들의 권한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벌제도를 도입하며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기업이 정부·사회적 부담을 대행¹⁵⁾해온 데 따른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정부에 떠넘기는 조치 또한 중요하겠다.

넷째, 중국 동북3성 진흥은 반드시 비교우위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는 산업설치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3성 지역이 개혁개방 이래 석유·화학·철강·기계·조선·자동차 등 막강한 중화학 공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에 비하여 경제성장속도가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장전망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의 발달이 부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심양·하얼빈·장춘·대련 등 동북3성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들이 첨단기술제품 생산이 미미한 가운데 여전히 전통적인 공업제품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니, 여타 도시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번 중국 동북3성 진흥의 기회를 이용하여 핵심부품, 핵심제품은 대기업이 책임지고 그 나머지는 하청업체에 맡기는, 즉 예전 ‘기업의 특정지역에의 집중’ 현상을 ‘산업집중’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한편 ① 상대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전기전자, 자동화 부문,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등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② 기술도입 등을 통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핵심부품, 제어시스템 관련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에 필요한 각종 대형 기계설비, 지하철과 같은 운송설비, 전자와 통신설비, 핵 발전 등 대형설비들의

15) 기업이 정부 부담을 대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소방대 등을 운영하는 것이며, 사회 부담을 대행하는 사례는 학교·병원·탁아소·유치원·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산화를 추진해 기계공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③ 생산능력이 과잉이고 효율이 낮으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플라스틱, 철강, 석유화학, 화력발전, 건축자재와 관련된 공장을 폐쇄, 합병, 매각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제휴 등을 거쳐 점차 이들 기업을 합병 함으로써 대형화를 도모하며, ④ 나아가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기계설비와 생산 공정 수준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 원자재 공급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⑤ 농산물 가공, 선도 유지, 보관, 판매 등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규모 경제를 실현하여 농산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⑥ 금융, 부동산,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중국 동북3성 진흥은 반드시 동북3성 경제단일화, 즉 ‘대동북 전략’의 의식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현 경제의 지구촌시대, 지역경제의 단일화시대 지역 내 국가간, 특히 한 나라 지역간 상호 폐쇄는 해당 지역 경제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동북3성의 경우 지역간 장벽이 아주 높은데 예컨대, 동북3성 내에는 분명한 성벽(省壁), 동일 성내에는 시벽(市壁), 동일 시내에는 현벽(縣壁), 동일 현내에는 향벽(鄉壁)이 엄연히 있다. 당연히 이런 행정지역 소재의 지방정부에서는 그 폐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지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라 경제의 이익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상해를 포함한 장강 3각주, 광주를 포함한 주강 3각주, 북경-천진을 포함한 발해만 지역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지역통합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3성도 반드시 각성간 협력의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통일적인 발전방안을 작성함으로써 동북3성 제품과 요소시장의 단일화, 운송 시스템의 단일화, 정보의 단일화, 산업의 단일화를 통한 ‘대동북 전략’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4장 중국 동북3성 진흥과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상

금번 동북3성 진흥에 관한 중국정부의 결정이 발표되자 동북아 주변국들, 특히 길림성, 요녕성과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반응은 각별하였다. 최근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제1의 교역파트너가 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내경제의 침체 속에 해외에서 본국의 경제불황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동북3성 진흥에 관한 개발계획은 도전과 기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최근 중국 동북3성 진흥 기회를 활용하여 그 이익을 최대화 하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한 한국은 남북경협이 차원에서, 즉 중국 동북3성과 수십 년간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감안하여서라도 중국 동북3성 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리적으로 상해, 광주, 청도, 천진 등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위치에 있는 동북3성 지역에 대하여 회의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중국 동북3성 주민들의 의식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농경사회의 나태의식, 식민사회의 노예근성, 계획경제시대의 경직된 기계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취성과 창의력의 부족함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동북3성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중국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런 엇갈린 반응은 이해가 간다. 사실 이번 중국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그 계획들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일지라도 그 성공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정부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북3성 진흥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중앙에 ‘동북3성 등 노 공업기지 건설을 위한 지도그룹’, ‘동북3성 전문 사무실’을 설립하여 운영단계에 진입했는가 하면, 동북각성들도 일단 먼저 운송망 시스템 보완건설부터 착수하여 하대선(하얼빈-대련)·하주선(하얼빈-만주리)·하치선(하얼빈-치치

할) 등 주요 구간에 대하여 보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380km의 ‘동부철도’¹⁶⁾ 건설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출발은 무난하게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재원·기술·노동력 및 산업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 동북3성과 한국 사이에 많은 상호 보완성이 실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남북교류의 강화 차원에서도 한국의 중국 동북3성 진흥과정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또한 구체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면에서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한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시켜 그 지역경제의 글로벌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한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대외교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국외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이번 중국 동북3성의 진흥 기회를 이용하여 대외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축소에 도움이 됨으로써 한국국내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룰것이다. 한국 내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서해안 지역은 중국 동북3성과 인접하여 있다. 한국의 서해안 지역이 이번 중국 동북3성의 진흥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증대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신흥산업을 육성하면,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쟁우위를 발휘하여 중국시장 개척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가까워지면서 자동차 등 소비품시장의 전망이 밝은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이 WTO¹⁷⁾에 가입하면서 시장은 한층 더 개방될 것이

16) ‘동부철도’는 중·러, 중·조 국경을 경과하는 철도선으로서 북단의 중국 흑룡강성 묵단강시 수분하로부터 길림성의 도문시·통화시, 요녕성의 본계시·단동시·장하시를 거쳐 남단의 대련까지 이 어진다.

17) 중국의 WTO 가입시의 관련약속에 의하면 중국은 2006년 자동차의 관세를 현재의 80-100%에

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은 반드시 중국 동북3성의 지연관계를 충분히 이용하여 기술, 자금의 투입을 돌파구로 현지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생산과 수송원가를 낮춘다면, 단순 수출무역에 의존하여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는 불리한 국면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업적 기회에 임하여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 동북3성과 한국은 어떤 형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제협력을 추진시켜야 하는가? 필자는 최근 중국 동북3성 경제의 기본상황과 한국의 구체적인 경제특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중국 동북3성·한국 간 경제협력은 일단 먼저 대련을 시범적으로 선택하여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다음, 점진적으로 심양·장춘·하얼빈 방향으로 북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국 동북3성의 경우,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에 비하여 요녕성이 경제, 특히 공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요녕성은 또한 대련 등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어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자유치상황도 가장 양호하며 지역 주민들의 시장경제 의식도 이미 깊이 뿌리박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대련을 시점으로, 또 대련에서도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국가급 개발구역, 첨단기술 개발구역, 수출가공구역 및 보세구역 등 개발구역을 위주로 우선 먼저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을 시작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나 중국 동북3성의 입장에서나 모두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쌍방이 상생(win-win)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둘째, 한국의 자본 및 기술적 우세를 고려하여 한국의 중국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방식보다 최근 동북3성의 국영기업 매각·합병·인수·지분참여·

서 25%로 낮추고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10%로 낮출 뿐 아니라, 수입량의 제한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의 치열정도도 상상할 수 있다.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 기회를 활용한 M&A 방식 등의 투자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중국 동북3성에는 부도위기에 처한 국영 대·중·소기업이 워낙 다수 실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업들의 강도 높은 정리 및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시장경제 관리시스템에 익숙하고, 자본 및 기술적으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동북3성 국영기업의 대량 정리 및 구조조정에 참여하면 중국 동북3성의 소유제 다양화, 기업의 활성화 및 취업부담 해소 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비용의 절감, 유희기술의 활용 및 인건비의 절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win-win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본다.

셋째, 중국 동북3성 공업구조가 중·화학 공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동북3성·한국 간 경제협력분야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공업부문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인정한다. 중국 동북3성은 이런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세자원을 향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생산의 여건도 구비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상황과 관련하여 설비의 노화와 기술의 낙후성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이미 구조조정단계에 진입, 많은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중·화학 공업분야의 자본, 기술을 중국 동북3성으로 이전할 경우, 한국의 투자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의 자동차산업에 투자할 경우, 향후 10~15년 사이 중국의 자동차수요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시장 전망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금번 중국 동북3성 진흥의 기회를 이용하여, 동북3성 자원형 도시에서 새로운 대체산업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동북3성·한국 간 경제협력에는 목재가공업, 농산물 가공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동북3성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동북평야가 있어 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뿐 아니라, 동북3성의 쌀은 일교차와 비옥한 토질로 인해 미질이 좋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중국 동북3성의 두류 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35.5%, 옥수수 생산량은 전국의 26%, 우유는 21%를 점하고 있다. 한편 중국 동북3성에는 전국 삼림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삼림기지가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 접경지대에도 삼림자원이 풍부하다. 이는 중국 동북3성과 한국 간 농산물가공 및 목재가공공업과 관련하여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만일 협력이 원만할 경우 중국의 자본, 유희 노동력 해결, 한국의 시장관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맺음말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이 제2단계로 진입하면서 호금도 등 4세대 지도부는 등소평의 심천 등 4대 특별경제구역 제안, 강택민의 서부 대개발 제의에 기초하여 동북3성 진흥에 관한 방침을 제출하여 동북3성을 중국의 4대 경제성장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북3성 진흥전략은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인프라 등 기본적인 경제환경 시스템마저 미비한 서부지역을 개발해 본 결과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분간은 동북3성 주민들의 시장경제의식의 결여 등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암초에 부딪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10년까지 기반을 구축한 위에 2020년에 가서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하나의 성장축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해본다.

한국의 경우, 대륙과 이어져 있음에도 ‘섬’ 신세가 되었던 냉전기를 감안할 때 남북교류, 특히 최근 침체된 국내경제 및 한·중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중국 동북3성과의 경제교류는 한층 더 중요하지 않는가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중국 동북3성의 미래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동북3성과 한국 간 경제협력은 반드시 엄격한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미리 선정한 협력부문부터 추진하는 등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관계가 반드시 중국 동북3성 진흥의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마연춘. 2004. 「사영경제의 발전은 동북3성 진흥의 중요한 수단」. 중국 『동북아 포럼』, 제4기.
- 서전진. 2004. 「동북 노 공업기지의 취업부담 및 대책분석」. 중국 『동북아 포럼』, 제4기.
- 『동북아지역평화와 발전 제11차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 정사보. 2003. 『‘동북현상’ 극복의 출로 탐구』. 뇌고쾌참(腦庫快參).

Executive Summary

The Development of Three Chinese Northeast Provinces and New Conceive of Sino-Korea Economic Cooperation

Ren Ming

The fourth generation of Chinese leadership - since coming to the power in March 2003 - has clearly stated that they have been interested in the transform - adjustment and development of the thre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 trying to become them into the fourth growing point of economic increasing. On hearing this news, not only the people of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feel delighted, but also the South Korean people, who are neighbour of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think it is a good opportunity and challenge. Firstly, this paper makes a statement on the economic history, on the reason of declining and on the stratagem background of development of the thre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Secondly, the paper also sets forth the developing plans for the thre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of the center government. Thirdly, the author has brought out her own point of view concerning the problems of developing the thre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At last, the author bring us the question how to grasp the developing chance under the case of win-win for the thre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and South Korea. At the meanwhile, the author gives her attitude on the forms and models of Sino-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任 明

길림대학교 세계경제학과 졸업

김일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現 E-mail: ren_ming_2001@163.com)

著書 및 論文

「일한 FTA 체결의 긍정적요소와 부정적요소 분석」(중국 『현대 일본경제』, 2005)

「중·일·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립모델 분석」(『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협력』, 2004) 외

동북아시리즈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 새로운 구상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주)에원기획 전화: 745-809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5064-2 94320
89-322-5047-2(세트)

정가 2,000원

中國 東北3성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任 明

2003년 3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래 수년간 ‘녹 손 시대’ 취급을 받던 동북3성 지역경제에 대하여 개조, 조정 및 진흥시켜 중국 제4의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갑작스러운 희소식은 중국 동북3성 주민들에게는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한국에도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 동북3성 경제의 휘황찬란한 역사와 전략의 원인 및 금번 중국정부의 동북3성 진흥 결정의 전략적 배경을 살펴본 후, 최근 동북3성 진흥에 관한 중국 중앙정부 및 동북 각 성의 계획 및 동북3성 진흥과 관련하여 필자의 몇 가지 견해를 발표하였다. 금번 중국 동북3성 진흥기회를 중국과 한국은 어떻게 하면 상생(win-win) 의식을 가지고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89-322-5064-2
89-322-5047-2(세트)

정가 2,000원